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권력의 결집은 확고하다. 지지율 하락은 감당할 만하고 감수할 수 있으며 새로운 권력 질서의 확립을 위해 서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의 결과다. 권력은 두 가지 선택지를 갖는다. 하나는 단기 대안으로 지지층 중심의 진영 접근이자 보수적 요구의 부응이다. 대통령의 '국기 문란'과 '국가 범죄' 언급을 두고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권 탈기의 사정 정국 강경 드라이브 임박'으로 해석한다.

문제는 단기 처방으로 지지층을 지킬 수 있는나인대 이게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여론 동향은 '데드크로스'를 넘어섰다. 출범 두 달 만의 이런 사태는 심각한 상황이고 '총체적 난국'이다.

6월 중순 이후의 조사를 보면 ARS방식에서는 부정 평가가 절반을 넘었고, 면접 방식에서도 긍정 평가가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였다. '이준석 정계 효과'로 부정 평가가 60%를 넘는 조사(긍정 평가는 36%)가 나왔는데 정부 출범 후 가장 큰 격차다. 정당 지지도에서조차 민주당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정 없는 하락세로 저점을 계속 경신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를 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는 핵심 지지층

'윤석열 어젠다' 위기 극복의 시작이다

의 동요를 의미한다. 2030과 50대 그리고 중도층이 먼저 떠났고, 영남과 60대 이상 그리고 보수층의 이탈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윤석열 지지의 '반사제적 성격' 때문이다. 콘크리트 지지층은 없다. 작년 12월 31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인 3월 2일까지 여론조사 260개의 정권 교체 평균 지지 여론은 51.6%였다. 대선에서 그는 '반(反)문재인+비(非)이재명 결집'으로 48.6% vs. 47.8%, 0.73%포인트 차의 신승을 거두었다. 정권 교체라는 대선의 정치적 어젠다에 올라왔고,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평범하고 상식적인 사람들'의 필요와 지지로 간신히 이겼다. '정권교체의 도구'가 '윤석열 권력과 정치'의 출발점이여야 하는 이유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정권 교체 이후의 '윤석열 어젠다'를 요구하는 민심이다.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 그리고 '법치·공정·상식'이 핵심이다. '시대정신의 윤석열 어젠다'는 2030과 50대 그리고 중도층의 지지를 견인할 수 있다. 영남과 60대 이상 그리고 보수층의 지지는 당연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 특별감찰관의 신속한 임명이다. 그게 법치다. 특별감찰관은 주변 관리의 엄정함을 상징한다. 스스로에 대한 경계이기도 하다.

둘째, 인사 시스템의 점검과 복원이다. 대통령은 '법조인이 폭넓게 정관계에 진출하는 게 법치 국가'라고 믿지만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은 '검찰 공화국' 주장에 공감한다. '측근과 인맥 국정' 논란에서 벗어나는 게 긍정이자 상식이다.

셋째, 여당과 한덕수 총리 내각의 겸손과 여유다. '체질적 총성 여당'은 물론 '여의도 출장소'의 오명을 벗어

난 여당과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내각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게 공정이다.

윤 대통령의 지난 두 달은 조직과 시스템이 아니라 본인의 감으로 밀고 나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대통령실 참모도 내각의 장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그게 상식이다.

그는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작년 6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라도 검찰 총장을 물러난 게 작년 3월 3일이다. 1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시대정신과 국정 과제 그리고 정책적 수단 등에 대해 고민할 시간과 기회가 당연히 적었다.

여당이 부족한 부분을 매워야 한다. 과도기적 성격의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당과 국회에 다른 목소리가 존재하게 하는 여유와 겸손은 정치의 복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게 공정이자 상식이다.

넷째, 6%를 넘어선 24년 만의 최고 물가 상승률에 국민은 역대급 경제 위기를 걱정한다. 공감하는 권력이 자함개하는 긍정의 리더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여든 아든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권력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더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게 상식이다.

국민의 권력 심판 주기가 빨라졌다. 어떤 권력도 예외는 아니다. 민심이 우러서서 짜증 그리고 분노로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윤석열 어젠다, 위기 극복의 시작이다.

종교칼럼

지도자의 도덕성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훈을 새삼 배우게 된다. 사람은 자리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대접받는다 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나 보이는 것으로만 치면 가진 것에 의해 높아도 지고 낮아도 지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평가받게 된다. 무슨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 거기에 상응한 되돌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 어긋남 없는 인과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인과의 보응은 육도 윤회 속에서도 아니라 현실 역사 속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역사는 세상의 거울이라는 말이 천근 같은 무게를 갖게 되는가 싶다. 일제의 탄압을 받던 식민지 시절을 어떻게 살아왔으며 분단과 군부 독재, 민주화의 과정에서 어떤 생각과 행동을 했는가 따라 역사는 그들의 삶을 평가하고 대접하게 된다.

역사의 평가는 돈이나 권세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려질 수 있으나 그 진실을 영원히 가리지는 못한다. 감춰졌던 면은 드러나고 과장되고 왜곡되었던 것은 바르게 된다. 인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당 인물로서는 몹시 상상이 되겠지만 지난 시대 우리가 함께 범했던 공업을 참회하고 바꾸어 가는 과정이라고 여기고 운명처럼 받아들인다면, 하는 생각도 해 본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언제까지 먼지를 쌓아 둘 수는 없는 노릇이고, 누가 누구를 심판하려 드느냐고 하다 보면 시비와 욕석이 가려지지 않은 채 가치의 혼돈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시대에서 깨어나 정당하고 좀 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중요시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조짐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으로 본다면 검증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심판대 위에 선 사람이나 다 같이 역할 분담자로서 역사적 공헌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도덕의 잣대는 중요 공직자뿐 아니라 사회 모든 지도자에게도 요구되어질 것이며 점차 일반적 가치 기준으로 확산되리라 생각한다. 대중사님 말씀 중에 "앞으로는 관공정이나 사회 방면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데에도 반드시 종교 신자를 많이 찾게 되리라"고 하셨다. 도덕성이 인격 평가의 중요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라 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지도자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려 드는 것은 그들은 보통의 사람들보다 우월한 대접을 받고 때문이다. 남다른 권리를 갖는 사람은 남다른 의무도 져야 하는 것이다. 참회와 반성으로, 처음 하고자 했던 마음으로 개인·가정·사회·국가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기고

북동에서 시작하는 광주다운 도시계획



윤희철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이사

시끄럽다. 시장이 바뀌는 공백기를 노려 급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조건부로 통과됐다.

북동은 수창초등학교 주변의 13만 4783㎡의 땅에 지난 2005년 5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었고, 구역 지정이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동안 이 지역은 방치된 채로 남았고, 2019년부터 투기꾼들이 지분 쪼개기에 들어갔다. 60㎡ 이상의 토지에 대해 분양권이 보장된다는 기준을 노려 부동산 투기가 이뤄졌다.

보통 장기간 재개발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거 환경의 질이 너무 나후되기 때문에 구역을 해제한다. 하지만 이 지역은 너무 일찍 재개발 구역으로 설정되어 법·제도적 보호 장치도 없이 방치되었다. 결국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내버려 두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그곳에 오래 거주하고 상업 활동을 하는 주민들이 받게 되었다. 일단 재개발 구역으로 설정되면 증개축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북동은 구도심의 유일한 중심 상업 지역으로 금남로와 충장로를 이어 중흥동과 광주역에 이르는 한복판에 위치한 곳이다. 개발사가 제시한 계획이 모두 2200여 세대에 이르는 주거 단지를 만드는 것이다. 당장 세대 수가 늘고, 인구가 유입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이곳이 상업지역이란 점이다.

결모습은 주상복합 아파트이지만, 상업 용도가 고작 15퍼센트에 불과한 광주의 제도적 허점을 노린 것이다. 상업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상업 활동의 축이 중간에서 딱 끊어진다. 북동은 다

소 침체된 금남로와 충장로의 상권이 중흥동을 넘어 광주역까지 연결하는 핵심축이다. 이 지역이 가진 상업 기능을 최소화되는 것은 결국 구도심 활성화를 아예 포기하는 것이다. 솔직히 누가 아파트 단지로 소평하러 가는가.

당장 놀거리, 즐길거리가 없다고 '노점 도시'라는 부정적 인식까지 판치는 현 상황에서 상업 지역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도시계획이 그대로 승인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결정이다.

앞으로도 재개발을 위한 절차가 남았다. 개발 단계부터 상업 지역의 역할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건축물의 높이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다. 멋진 디자인의 건물과 함께 누구나 이곳에 가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북동성당, 광주학생운동 기념탑, 김정호 거리 등 근현대 역사문화 자원이 즐비한 곳이다. 북동이 가진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어떤 개발 방식이라도 원주민을 위한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 지분 쪼개기로 소수의 투기꾼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부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도시를 망치면서 원주민이 고통받는 비극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북동은 광주 도시계획과 재개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성남갑 아파트 개발로 상업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만들어 도시의 발전을 저해할 것인가. 아니면 광주의 새로운 명소로 가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북동에서 광주다운 도시계획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

社說

'빅스텝'에 이자 부담 커진 금융 취약층 보호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잡고 한미 기준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지만,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도 덩달아 커졌다.

금통위는 그제 '통화 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2.25%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4·5월에 이은 3회 연속 인상이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통상적 인상 폭(0.25%포인트)의 두 배인 0.50%포인트 올린 것이나 세 차례 연속 인상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러한 결정은 그만큼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본 결과로 보인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원자재·곡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24년 만에 최고치인 6.0%를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 금융 취약층에 큰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신용

도가 낮은 서민층이나 소상공인일수록 더 많은 이자 부담 증가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되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2020년 말과 비교해 6조 4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반 가계도 1년 사이 금리가 폭등하면서 아파트 대출이나 각종 투자 시 빌린 금융 이자 폭탄에 직면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중소기업들도 대출 의존도가 높아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 상승으로 인한 타격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지적한 것처럼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금융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만기 연장·금리 감면 등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리 급등으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대출 부실이 속출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정방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끝없는 왜곡...5·18 헌법 전문 수록 서둘러야

인터넷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18을 '폭동'이라고 부르고, 전라도를 비하하는 내용의 표현물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5·18기념재단은 그제 "5·18 왜곡·폄훼 실태 모니터링 결과 올 상반기에만 총 949건을 확인해 이 가운데 609건을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표현물 대부분은 인터넷 포털 및 극우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이나 댓글, 영상이었다. 페이스북 등 SNS에도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 내용을 담은 표현물이 적지 않았다.

왜곡·폄훼 표현물의 주요 내용은 5·18을 '폭동'(726건·77%)으로 부르거나 '북한군과 관련돼 있다'(139건·15%)는 것이었다. 또한 5·18 전개 과정을 왜곡하거나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을 담은 표현(84건·8%)도 확인됐다.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제정해 시행 중인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5·18 왜곡 처벌법)에 대한 비하도 여전했다.

문제는 5·18을 왜곡한 글과 영상이 일부 고령자와 청소년들에게 확인된 뉴스처럼 전파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포털과 유튜브에서 이들 내용을 접한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마치 검증된 정보처럼 받아들여 사실로 믿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5·18을 왜곡하는 이 같은 행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며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더 이상 5·18 왜곡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윤 대통령이 약속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서둘러야 한다. 그것이 진정 5월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길이다.

無等鼓

아홉 골. 한여름 밤 무더위를 식히는 시원한 골 소나기가 쏟아졌다. 팀 K리그와 토트넘의 경기는 선수와 관중이 어우러져 즐기는 축구 축제였다. 관중은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와 골이 나올 때마다 팀을 가리지 않고 박수와 환호로 응원했고, 토트넘의 콘데 감독은 선수들을 팔로루 기용하며 팬 서비스를 했다. 특히 손흥민을 후반 3분에 투입한 것은 관중을 위한 콘데의 특별한 배려였다. 그라운드에 들어선 손흥민은 멋진 파넬라 킥으로 PK 골을 넣어 멀티 골을 완성했다. 케인을 비롯한 선수들도 또한 경기를 마친 뒤

타다운 모습을 보여줘 '네이마루'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었다. 그는 훈련 도중 발등을 다쳤지만 평가전에 선발 출장해 80분간 두 골을 넣었고, 브라질 대표팀은 월드컵 원정 16강에 도전하는 한국 대표팀에게 훌륭한 모의고사 상대가 돼 주었다.

프리시즌 이벤트가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지난 12일 태극에서 열린 맨유와 리버풀의 이벤트 경기에는 호날두가 '노 쇼'를 해 팬들의 분노를 샀다. 다음 시즌 맨유와 '헤어질 결심'을 한 호날두가 프리시즌 아시아 투

선수와 팬

어의 비행기를 타지 않은 것이다. 호날두의 노 쇼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

다. 2019년 서울에서 열린 이탈리아의 유벤투스와 팀 K리그의 친선 경기에서 호날두는 컨디션 조절을 이유로 벤치만 지켜 '날강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팬이 없으면 선수도 없고 경기도 없다. 이번 프리시즌을 통해 특히 케인과 네이마르의 팬을 대하는 태도는 감동적이었다. 케인, 네이마르, 호날두... 슈퍼스타는 많지만 팬을 대하는 태도가 모두 같지는 않은 것 같다.

/유재관 편집담당 1국장 jkyou@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